

충남리포트 제116호

ChungNam Report

2014. 07. 21.

CONTENTS

〈요약〉

1. 문제제기
2. 충남 보육정책 진단 및 조사결과
3. 충남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방안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hipig@cwpl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보육현황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진단하고 충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요약

- 보육정책은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므로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임. 또한 영유아의 투자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 및 뇌 발달에 효과적이며, 이 시기는 교육의 기회비용 효과가 가장 큰 시기임.
- 그러나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95%는 설립주체가 민간이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10%정도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서비스 전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국가재원부담 비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국비 및 지방비가 5:5로 투자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예산의 1/10 규모이므로 국가의 재원부담을 확대해야 함.
 - ②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확충 및 안정적 지원 -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
 - ③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평가인증제도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필요와 전통적 가족의 기능 약화에 따른 영유아 양육은 사회 공동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노령화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출산율의 저하로 양육의 부담은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대두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53.9%에서 2011년 5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61.8%보다 낮으며 최하위 수준임
 - 가족의 소규모화로 2010년 평균가구원 수는 2.71명에서 2035년 2.17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증가로 가족 내 양육기능이 약화됨.
 -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평균 1.71명과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이때 유럽·북미 등 선진국은 평균 25.9%로 예측하고 있음.

- 특히 영유아기 때의 투자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과 뇌 발달에 효과적이며, 학업능력 및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도 높음.
 - 유아보육기관의 전반적 질이 유아의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이 독립성과 사교성에 영향을 미침(Melhuish, 2007).
 - 미국 12개 주의 교육투자 비용을 인간의 연령별 뇌 발달 속도와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6세 미만의 영유아기 뇌성장과 공교육 투자효과가 가장 높음(Bruner, Elias, Stein & Schaefer, 2004).
 - 유아기 때의 투자 수익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이나 졸업 후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보다 효율성이 높음(Heckman, 2000).

- 따라서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개별 가정에서 점차 정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 정책 또한 모든 영유아의 양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내용에서는 중립성과 보편성,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 ‘아이사랑 플랜’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가 국가 책임제 확대이며, 6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부모 비용부담 완화임(육아정책포럼 33호, 2013).
- 2013년 3월부터 만0~5세 전 계층의 보육·양육비용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84개월 미만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보육아동의 30% 수준 확대) 및 평가에 따른 지원연계, 누리과정 도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임.

●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보육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보육료 비용부담은 줄지 않고 있으며, 보육수요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음. 따라서 국가의 보육재정 투자규모로 보아 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공적이고, 보편적이며, 개방적임을 의미하는 공공성의 필요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보육서비스 공공성의 구성요소 중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은 5.2% 수준임.
- 공적인 보육재정이 지원되고 있어, 사적으로 설립된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공적 관리를 통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을 진단하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인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전문가·실무자 간담회, 충남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충남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대학 교수(일부 대전 대학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회수된 설문지 중 총 433부를 분석하였음.

1) 시장체제에 기반을 둔 공급체계의 본질적 한계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구성요소 중 공적 전달체계의 확보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요소임. 하지만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노력은 민간어린이집 확대비율보다 낮음.
 - 충청도내 어린이집은 2013년 현재 2,082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6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3.1% 차지(전국 42,527개소 중 5.2%).
 - 충청도내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230개소 증가(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증가)

- 보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관리 부실, 안전 관리 등 불법¹⁾으로 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고,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및 급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분야 정부예산은 2011년부터 매년 16.2%, 21.1%, 34.8%가 증가하여 2013년 41,778억 원임(각 연도 국회 본회의 의결예산).
 - 충남 보육예산 4,680억 원 중 79.1%가 보육비 지원.
 - 설문조사 결과,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교사 임금체계 개선 39.11%, 관리 감독 방법 개선 26.0%, 표준교육비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18.59% 순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반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장은 ‘표준교육비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임금체계 개선’, 학부모와 전문가는 ‘관리감독 방법 개선’을 우선순위로 나타내고 있음.

1) 보건복지부, 2013. 11. 7 보도자료

- 공공성의 가치 중 형평성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요소임.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률은 민간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높으나, 정원충족률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높아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를 반증하고 있음.
 - 충남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3,346명으로 전체 이용아동 68,985명 대비 4.9% 수준에 해당됨(전국 이용아동 대비 10.1%).
 - 충남도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국공립어린이집 84.6%, 민간어린이집 77.1%로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를 유추할 수 있음.
- 이에 보육서비스 제공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 및 공공성을 담보한 어린이집 확충이 필수적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110개소(신축 50.0%,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27.3%, 기존시설 매입 및 구조변경 20.0%, 민간어린이집 매입 2.7%), 충남 7개소(신축 4개소, 기존시설 매입 및 구조변경 3개소)가 확충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은 민간어린이집 설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지매입 및 설치비 등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축이 가장 많음.

2)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

- 어린이집은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설립목적, 이용대상, 보육료 지원방식, 필요경비 수납 기준 등은 같으나,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인건비 지원 및 지출, 차액보육료 추가 수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
 - 모든 어린이집은 공통으로 연령별 지원 단가에 의한 보육료 수입이 있으며, 국공립·법인·법인단체 등 지원시설은 원장, 영유아별 담당교사 등에 따라 인건비의 30~80% 지원.
 - 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영아는 기본보육료, 유아는 차액보육료를 지원.
 - 지원시설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호봉을 참고하여 지급하나, 미지원시설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건비 지출에서 차이가 발생.
-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인증률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충남도내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60.8%(국공립 89.3%, 민간 54.5%).
-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66.8%(국공립 89.8%, 민간 65.9%)
- 충남 보육교직원 8,753명 중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78.6%.
- 조사결과, 어린이집 근무여건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3.31점, 민간·가정 어린이집 2.36점 (5점 척도)으로 다수가 분포된 민간이 열악하다고 응답.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확충에 대한 요구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도민은 어린이집 유형별로 운영 및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로 국공립(3.45점), 법인(3.33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2.82점)과 민간(2.85점)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추가확충에 대한 요구도는 국공립(3.63점), 직장(3.61점)어린이집 순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으로 신축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의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남.
 -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을 귀속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32.32%, 지자체에서 신축하여 위탁운영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각각 22.25%.
-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지자체에서 전환의지를 가지고 재정을 마련하여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타남.
 - 지자체의 전환에 따른 재정확보 56.02%, 보육교직원의 임용 승계 15.96%
 - 응답자에 따라 차순위 선택에 차이가 나타남. 원장은 ‘부지 및 건물 매매가격’, 보육교사는 ‘교직원 임용승계’, 학부모는 ‘원장의 경영권 승계’.
- 충남 도민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가 공보육화의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공보육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인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21점으로 나타남.

4)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모델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2011년부터 실시
 - 충남 공공형 어린이집은 96개소(충남 민간·가정어린이집 대비 5.3%).
 - 충남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92.0%(국공립 정원충족률 84.6%).
-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비 확대 요구 39.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차순위 응답으로 원장은 ‘취사부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는 ‘운영비 지원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후 부모로부터 차액보육료 수납을 금지하고 정원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수준에 못 미침.
 - 공공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규모로 확충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운영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공성을 높여야 함(서문희, 2013b).
- 충청도민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가 요구됨.
 - 조사결과,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도는 2.89점(5점 척도)
 - 특히, 어린이집 이용자인 학부모의 인지도(2.41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보해야 함.

- 충남 보육수준을 기준으로 보육정책을 진단한 결과,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보육서비스 질 등을 향상해야 함.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원 · 관리기능을 확대해야 함.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재원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적인 비율로 보아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하거나 경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보육재정 구조로 보아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비중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매입비를 현실화해야 하므로 재원 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분담방식을 조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추진되나, 최고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어, 설계용역비, 부지 매입비 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설치비 지원액을 탄력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설치규모, 설치조건을 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

- 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 설치규모나 설치조건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지원 실시

-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교사자격 등 기준에 따라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함.
- 지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고, 향후 공공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체계 구축

- 2013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의 비중이 높아짐.
-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 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직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등 사후품질을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 홍보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취약보육 운영여부, 어린이집 비용 등 정보에 대한 공개 등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만큼 운영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함.

3)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체계 정비

● 어린이집 지원관리를 위한 행정력 강화

- 지역단위 전 어린이집 대상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전 보육교직원 처우 및 급여기준 마련


● 평가인증의 의무화

- 평가인증결과 공개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며, 부모의 선택 시 기준으로 작용
- 보육서비스 질 관리 합리화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운용의 독립성 확보
-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인증 전담 컨설턴트 배치

-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교사자격 등 기준에 따라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규모는 지자체의 평가인증률 순위에 의해 정해짐.
- 따라서 충남도는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인증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민간어린이집 원장 지침 교육 강화

- 어린이집 설치예정자는 설치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환경 등 조건에 해당
- 어린이집 설치예정자는 원장 자격 기준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취지, 목적, 의무, 지침 등 교육 강화 필요 

최 은 희 선임연구위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0-0251, hipig@cwpli.re.kr

※ 이 글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지원한 ‘보육정책 진단 및 공공성 강화 방안’(전략과제, 2013)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201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11. 7).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 점검 결과.

서문희. 2013a.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심각 정부는 시설 확충에 힘써야. 육아정책 브리프, 통권 제11호.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2013b.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육아정책 브리프, 통권 제15호. 육아정책연구소.

최은희, 이일주, 이성희, 황성원. 2013. 충청도민의 보육정책 진단 및 공공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1, 2012, 2013년도 국회 본회의 예산의결.

충남리포트(2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 · 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 · 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 · 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 · 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 · 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 · 이선희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 · 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 · 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 · 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 · 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 · 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효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3-04	에코유지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야·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정가정책의 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2013-10	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지역경제분야-	김양중	2013.09.02
2013-11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	윤정미	2013.09.16
2013-12	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	김종화	2013.10.24
2013-13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이인희	2013.11.15
2013-14	유류사고 이후, 태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	김종화	2013.11.18
2013-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백운성	2013.11.19
2013-16	충남 스포츠마케팅 추진방안과 과제	김경태	2013.11.20
2013-17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	이관률	2013.11.21
2013-18	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김양중	2013.12.19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